‘아동학대 수사’ 골든타임 안놓친다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부실수사 논란
서울경찰 “소아과 의사 등 자문단 구성”
전문의 8명·변호사 4명 등 총 19명으로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제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관련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관들의 책임 부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앞서 경찰청이 내놓은 제도 개선책에) 4가지 정도를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책임수사 강화’ 차원에서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은 최초 수사팀에서 이후 사건까지 병합해서 수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여러 번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또 수사지휘 체계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은 서울경찰청 주요 사건으로 분리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며,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여기에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 담당자들이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게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해당 자문단은 소아과 전문의 8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전문기관 관계자 3명으로 총 19명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 전문화 교육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전문화 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현장 초동조치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이들 중 일부는 바로 시행하고 일부는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도감독 체계 강화와 자문단 구성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벌어진 사건(양천경찰서 신고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지휘라인의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모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숨진 여아는 사망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5월, 6월, 9월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수사 브리핑에서 ‘수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에 질문이 집중되자, 경찰은 “5월에는 멍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세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아이가 야위었다는 신고였다”라고만 말했다.

지난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여아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

이때도 경찰은 여아의 부모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공직자에 상습 폭언·갑질’ 광주 광산구 조상현의원 제명

당사자 제외 전원 찬성으로 가결

공직자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광주 광산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조상현 구의원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명 전원이 징계안에 찬성했다. 의원들은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3차례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익명 제보 내용을 통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중상모략으로 (자신을) 압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 의원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권유하고, 해당 카페 주변에 또다른 경쟁 가게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등 지위 남용 의혹도 나왔다.

또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도덕성과 의원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3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언·갑질을 일삼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된 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 해당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도주선박 검거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있다가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축구골대 모양의 새우사각틀(6m×4.5m)을 싣고 있던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A 호(4.98t)를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호 선장 B 씨(61)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출항해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 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됐다.

A 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20㎞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여수 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고질적인 민원 유발을 없애기 위해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끼어들기 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구속

출근길 교통혼잡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5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행암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자 단속하던 B순경을 차량 조수석에 매달고 약 300m를 주행,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어 정체를 유발했고, 갓길에서 B순경이 교통지도를 하며 과태료를 물리려 하자 조수석 창가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했다.

A씨는 경찰에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운전 당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유리창에 낀 성에로 B순경이 매달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액 알바 유혹…’ 보이스피싱 가담한 수금책 50대녀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학동의 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80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구직 커뮤니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글을 보고 연락,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책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때마다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카드 이용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지난 21일 검거했다.

‘대리 기사 행세’ 주차차량 금품 턴 30대 영장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풍암동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차량 5대에서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동퀵보드를 타고 다니며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